

노사관계 동향

노사분규 동향

◆ 노사분규 현황 비교적 안정된 출발

○ 2006년 1월 20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보다 감소함(표 1 참조).

- 분규발생건수는 3건, 분규참가자수는 161명, 근로손실일수는 11,020일로 각각 전년동기 수치인 7건, 712명, 11,856일보다 크게 감소

〈표 1〉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

(단위: 개소, 명, 일)

	2004. 1. 20	2005. 1. 20	2006. 1. 20
노사분규발생건수(개소)	2	7	3
분규참가자수(명)	105	712	161
근로손실일수(일)	13,387	11,856	11,020

주: 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,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.
자료: 노동부.

노동정책 동향

◆ 국가인권위원회 인권NAP(National Action Plan) 권고안 의결

○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9일, 전원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의결했으며, 향후 5년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부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, 이주노동자 문제 등을 선정·발표

－ 비정규직 사유제한 및 차별처우 금지

-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법률에 명시해 객관적·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을 인정하고, 비정규직 고용 남용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등을 권고
-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임금·근로시간·복지 및 기타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법·제도를 정비하고,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 마련 및 특수고용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호대책 마련,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사업주, 파견노동자의 사용자 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을 권고
-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, 비정규직 노동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교육훈련에서 정규직 노동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권고

－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

-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규정 완화,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,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교육 시행과 안전장비 구비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,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과 기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통보의무제도 개선 등을 권고
- 이주노동자 가족의 양육권, 건강권, 교육권, 문화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 시행,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의료혜택 강화방안 마련, 이주노동자의 취학연령 자녀의 학교 입학 적극 유도 등을 권고

－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

-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 및 규정 준수여부 행정감독 강화, 보육시설의 확충 및 가정·양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, 육아·가족간호·자원봉사활동 등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·사회적 지원과 남성의 참여 장려 등을 권고

－ 취약여성 인권보호

- 모든 성평등정책 계획수립시 취약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 마련, 여성 장애인의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, 직업교육 실시 등의 고용촉진 프로그램 마련과

창업지원, 보육도우미 및 가족간호도우미 파견 등 지원,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의 근로보호 법안에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원칙과 성차별금지를 명시, 관련법 정비를 통한 가내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, 취약여성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상담전화 및 권리구제절차의 마련 등을 권고

－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권고사항

-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
-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대상 확대와 노동관계 지원 제한규정 폐지를 통한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촉진
- 쟁의행위 규제 최소화 및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부과를 완화하는 등의 쟁의행위 보호, 쟁의조정 대상범위 확대
-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
- 긴급조정제도 요건 명확화 및 그 절차 개선 등을 권고

－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 권고사항

- 여성고용촉진프로그램 마련, 여성의 고용과 근로조건에서의 직·간접적인 차별 개념의 판단기준 모색, 근로감독 강화, 신속한 분쟁 처리 등으로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
- 부당한 해고를 예방하고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해고의 실제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연령·장애, 비정규직 근로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법·제도 정비
-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, 농림업·수산업·축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의 근로기준 제고
-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고, 법정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며, 장애인·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
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을 정비하여 퇴직급여제도의 5인 미만 사업장 도입 시기를 단축하고 비정규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 강구
-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, 산업재해를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며,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
- 사전예방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시행하고 근로감독관의 증원 및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근로감독행정의 전문화를 제고
- 노동권 침해사건의 행정·사법 구제절차의 적절성·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
- 감시기술의 도입과 운영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를 감시할 우려가

있는 장비를 설치할 경우는 노동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권고

-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고, 노동부, 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,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NAP) 권고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, ‘수용할 수 있는 것’은 수용하되 ‘수용할 수 없는 것’은 장기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.

◆ 공무원노조법 시행

- 공무원노조법의 하위법령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안)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8일부터 시행됨.
 - 이에 따라 일반 공무원도 스스로의 단체와 대표자를 통해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이 마련됨.
 - 합법적인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,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.
 - ※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공무원단체는 ‘노동조합’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(노조법 제7조 ③),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.
 - 그러나 최근 70.4%의 찬성률로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파업권 허용, 단결권 보장 확대 등을 주장하며 설립신고를 유보하고 법외노조로 남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.

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

◆ 노사단체 신년사 발표

- 경총과 민주노총은 1월초 각각 신년사를 발표
 - 경총은 정부에 대해 정책일관성의 유지와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며, 정치권에 대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
 - 특히 사업장내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,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, 필수공익사업 범위 확대, 대체근로 전면허용 등의 반영을 요구

- 그러나 민주노총은 신년사에서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의 쟁취, 노사관계 로드맵의 폐지와 민주적 노사관계법 쟁취를 목표로 밝힘.
-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노동조합 간부의 도덕성 강화, 산별전환 촉진, 민주적 절차를 통한 이견의 조정과 책임 있는 집행의 기풍 확립 등을 천명

주요노동일지

(2005.12.26~2006.1.20)

년·월·일	노동정책	노사단체	기업 및 노동조합
2006. 1. 2		· 민주노총: 서울경인인쇄지부 성진애드컴분회 분류관련 집회	
1. 4	· 한국노동연구원: 이념적 좌표를 통해 본 노동운동의 미래 토론회	· 금속노조: 대구택지회 2005년 임금교섭 관련 부분파업	
1. 6		· 민주노총: 코오롱 노사갈등 관련 성명서 발표	· 도시철도공사노조: 쟁의대책위원회 개최 · 부산지하철노조: 부산교통공사 초대사장 임명 관련 항의집회 ·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: 크레인점거 관련 사측의 징계해고 등에 반발
1. 7		· 민주노총: 2006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	
1. 10			· 대한항공 조종사노조: 긴급조정 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· 대우자동차판매노조: 2005년 임단협 잠정합의
1. 11			· 서울지하철노조: 집행간부 현장 합숙 농성투쟁 돌입 ·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: 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
1. 12	· 한국노동연구원: 적극적 고용개선조치(Affirmative Action)제도 설명회		
1. 16		· 민주노총: 전남동부지구협의회 현대하이스코 협약서 이행촉구 기자회견 개최	· 도시철도공사: 2005년 임단협 잠정합의
1. 17		· 보건의료노조: 보건의료노조 탈퇴 7개 지부 가입승인 철회와 공공연맹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	· 한국조세연구원지부: 임단협 결렬로 파업 돌입
1. 18		· 한국노총: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및 조흥은행 관련 성명 발표	
1. 19		· 민주노총: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성명서 발표	
1. 20	· 한국노동연구원: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제도 개편방안(II) 간담회	· 보건의료노조: 세종병원지부 2005년 임단협 결렬로 부분파업 돌입	